

# “비서실장 내부 임명, 문제 기관장 인사조치”

## 윤장현 시장 임시회서 인적쇄신 원칙 밝혀

## 광주시의원 ‘인척비리·실폐인사’ 집중 성토

윤장현 광주시장이 11일 인척비리로 촉발된 인적쇄신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후임 비서실장은 공직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내부에서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이 정무라인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무라인의 핵심인 시장 비서실장과 대외협력관(정무특별보좌관)은 지난 6일 물

러났으며, 인척비리로 구속된 김보 전 정책자문관의 동생인 김모 비서관도 사퇴했다.

윤 시장은 정무특별보좌관을 두고 의회와 시민사회, 언론계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인사를 폭넓게 찾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장기 공석이 어려운 비서실장은 이르면 금주 중에 4급(서기관) 고참급에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특별보좌관을 두고 적임자를 찾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시장은 추가 인적쇄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시장은 “추가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면 정기인사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임명했지만, 평생 광주에서 살다보니 인연을 비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0년지기 등 일부 기관장은 우려가 있었지만,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하고 “임기가 있는 기관장이라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시장이 산하 기관장의 인사에 대한

언급은 외견상 원론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강도가 상당한 만큼 이른바 ‘문제 기관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시장은 이날 답변에서 김보 정책자문관의 구속으로 촉발된 인적쇄신 언급에 앞서 시의회와 시민에게 거듭 사과했다.

한편,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회 이정현(국민·광산1) 의원과 반재신(더민주·북구1) 의원은 윤 시장의 인척비리 의혹과 인사실폐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고, 인적쇄신 방침과 구체적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뉴스&정보 브리핑

#### 자동차·재산·주민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앞으로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허용된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이 적용 대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내년부터 혼인신고만 해도 주소지 변경 서비스

내년부터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전세 확정일자 확인,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또 인천공항공에서도 출국 전에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생신고를 대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3.0 향후 발전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해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 학생 이틀 결석면 보호자 학교방문 요청

앞으로는 학교 입학 때 보호자가 따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을 내지 않아도 학교에서 행정정보공유이용망을 통해 학생의 주민등록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게 된다.

나 가정 방문을 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공무원 징계대상 부정청탁 명시... 처벌 기준 강화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는 비위행위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상 부정청탁이 명시되고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또 국가·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

과실·비위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 전남도, 中 시장 공략 발판 마련

## 부세 증요 3만마리 어가 첫 분양

전남도가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양식에 심혈을 기울인 부세 증요 3만 마리를 최근 어가에 첫 분양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11일 “수입 의존도가 높고 중국시장에서 꾸준히 소비되고 있는 부세 증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2015년 인공종묘생산에 성공, 부세 증요 28만 마리를 방류한 후 어가에 첫 분양했다”고 밝혔다.

부세는 우리나라 서남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 분포하는 민어과 조기속에 속하는 회유성(온수성) 어종이다. 국내 연간 소비량은 1만3000t에 달하지만 생산량은 5%(662t)에 불과해 중국산이 국내 수요량의 95%(1만2490t)를 점유하는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어종이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생명곰나물돌봄센터 개소식 11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광주생명곰나물돌봄센터’ 개소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산구청 제공>

## “광주 문화산업 5인 미만 업체 70% ... 속 빈 강정”

### 이정현 “연매출 1억 미만 50%” ... 반재신 “문화관광업 활용 저조”

11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문화관광산업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광주시의회 이정현(국민의당·광산1)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문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광주 문화산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문화산업 사업체 중 5인미만 업체 수 비중은 70.3%로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연매출 1억원 미만 업체 수 비중도 50.5%로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높았다.

그러나 업체당 종사자 수는 전국 평균 7.3명에, 업체당 매출액 9억원에 턱없이



이정현 시의원 반재신 시의원

못미치는 등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문화콘텐츠 전문인력과 관련 분야 고용창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문화인재육성 신규자 교육을 받은 4853명 중 실제 취업으로 연계된 경우는 516명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333명이 전문인력 과정 교육을 받

았음에도 실제 취업을 한 수는 23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실제적인 문화산업체 유치 부족과 고용창출 부재로 문화산업과 연계된 신규 일자리는 매우 부족하다”며 “문화산업이 취업으로 연결돼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재신(더민주·북구1)의원은 광주시가 구축한 문화관광분야 공공 애플리케이션 활용도를 지적했다.

빛고을광주문화관광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지난 2011년 14억2000만원을 들여 구축했으나 개발 뒤 부실한 관리로 시민 불만은 높아지고 이용률은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 의원은 “지금까지 단 3차례 업데이트만 했을 뿐이고 등록 상품이 바뀐 적도 없고 개발 업체마저 폐업한 상태”라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해 문화산업의 전국대비 통계의 경우 업체 수는 3.5%로 높고 종사자 수는 2.2%로 양호한 편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 문화산업 각종 통계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광역시 중 가장 높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밝다”며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교육과정을 취업과 창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활용도가 낮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용률을 높이고 광주 문화재단, 광주관광컨설팅연구소 등과 협업으로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군의원 포함 논란

### 50명중 3명 ... 본래 취지 어긋나

전남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2기 전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현역 의원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치단체의 예산 심의를 하는 현역 군의원이 포함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본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해 7월 9일 제2기 전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0명(임기 2년)을 위촉한 뒤 기획·사회, 행정·환경, 경제·관광, 건설·소방, 농수산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위원 직업별로는 ▲사회단체 24명 ▲전직 공무원 6명 ▲농어업 6명 ▲자영업 5명 ▲지방의회 전·현직 의원 3명 등이다. 문제는 자치단체의 예산심의의 결정을 가진 현직 군의원이 전남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역 군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자신의 지역구(자치단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엘로우시티  
Jangseong

# 노란꽃잔치

## 제20회 백양단풍축제

2016. 10. 28~10. 30 장성군 백양사 일원

2016. 10. 14 ~ 10. 30 장성군 황룡강 일원(공설운동장)

주최 장성군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 함께하는 기업 (주)고려시멘트, 모해양조